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정책현장탐방

- 국가보훈처

임성현 | 보훈예우국장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국가보훈처

임성현 보훈예우국장

금년은 1919년에 거족적으로 일어났던 3·1운동 100년을 맞이한 해다. 이를 기념하여 국가보훈처 임성현 보훈예우국장을 만나 여성독립운동가 발굴 및 포상 등과 관련한 보훈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면담은 2019년 3월 6일(수)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실에서 가졌다. 면담 진행은 (사)역사여성미래 정현주 상임대표에 의해 이루어졌다.

장관급으로 격상한 국가보훈처,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상의 예우를 갖추고 보훈가족 중심의 따뜻한 보훈정책 마련 ... 특히 독립유공자 발굴 및 포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적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그 동안 소외 받았던 여성 독립운동가와 의병 참여자 등 독립유공자 포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 있어 ...



국가보훈처 임성현 보훈예우국장

정현주 대표(이하 정) : 안녕하세요.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 사단법인 역사여성미래의 정현주 대표입니다. 사단법인 역사여성미래는 한국 역사에서 기록되지 못한 여성들을 조명하고자 하는 단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번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터뷰에 응해주신 임성현 보훈예우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며, 이번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역사에서 조명 받지 못한,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독립운동가 특히 여성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현 국장(이하 임) : 반갑습니다.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 임성현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간행지, <젠더리뷰>에 인터뷰가 실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 : 작년 말 정부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종합계획』 3대 분야 12대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국가보훈처의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또한 이번 정부 들어와 실시하는 독립운동 행사가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임 : 국가보훈처에서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사업의 추진방향은 “기억과 계승, 예우와 감사, 참여와 통합”의 3대 분야를 설정하고 기억과 계승분야에 12개 사업, 예우와 감사분야에 8개 사업, 참여와 통합분야에 6개 사업 등 26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100년 전 지역과 세대, 종교를 뛰어 넘어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대한독립과 국민주권 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던 선열들의 정신과 뜻을 기억하고, 국민통합의 ‘새로운 희망의 미래 100년’을 만들어가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전의 행사와 다른 점은 첫 번째로 올해 4월 13일이었던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을 역사학계, 전문가 고증을 거쳐 4월 11일로 바로 잡은 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매년 국가보훈처가 이 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하는데, 금년은 3명의 여성독립운동가가 포함되어 다른 해보다 여성독립운동가가 많이 선정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1월, 2월, 5월까지 세분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선정되었습니다. 1월에 3·1운동의 상징인 유관순 열사를 선정하였고, 2월에는 28독립선언을 기린다는 의미로 김마리아 선생을 선정하였으며 5월 가정의 달에는 부부 독립운동가인 김순애 선생을 선정하였습니다. 셋째 3·1운동의 단초가 된 일본 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식을 동경 현지에

서 개최하여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였습니다. 넷째, 국외에서 개최하는 기념행사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하고 40여개의 국외 독립운동 기념행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 : 독립운동자 발굴과 선양의 문제는 세간의 관심을 끌고, 다툼도 많은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일제시대 수형기록 전수 조사' 사업의 시행 결과는 어디까지 왔으며, 특히 여성독립운동가 발굴과 관련해서 해석될 수 있는 지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20일자 동아일보에 의하면 수형카드 연구결과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들 자료 활용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임 : 국가보훈처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일제강점기 수형인 명부에 대한 전국 시(군)읍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독립운동 관련 죄명의 수형자 5,323명의 기록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지 않은 분은 2,487명으로 향후 독립유공자 포상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동아일보 기사에서 언급된 일제 감시대상 인물카드는 이미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자료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만,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가 독립운동 관련 입증자료, 결격사유 해당여부, 독립운동 이후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지다 보니 인물카드 확인자 중에서도 미포상 된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 : 독립유공자 지정에서 소외되었던 그룹, 특히 전체 유공자의 2%에 불과한 여성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범위와 심사기준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논의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임 : 그 동안 국회와 언론 등에서 포상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포상 범위와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 포상 심사기준 개선을 위해 2017년 하반기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2018년 1~2월에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4월에 포상 심사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정 : 일제강점기 여성의 경우, 당시 가정을 꾸렸던 기혼 여성의 경우, 가족 구성원이 독립운동가였다면 이른바 '독립운동 뒷바라지'를 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러한 경우엔 가족 구성원의 일기 혹은 수기를 검토해 운동 기록에 반영하려해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요?

입 : 국가보훈처는 2018년 광복절 73주년을 맞이하여 일제의 감시 속에서 과감하게 3·1운동을 전개한 배화여학교 6인의 학생들과 무장 독립운동을 지원한 석주 이상룡(李相龍) 선생의 손부 허은(許銀) 여사 등 177명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포상했습니다. 새로 포상받은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93명(애국장 31, 애족장 62), 건국포장 26명, 대통령 표창 58명이고 이 중 여성은 26명(15%)이었습니다.

또한 여성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기 위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실시(‘18.1.12~5.12)해서, 202명의 여성 독립운동가를 발굴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은 분은 1949년 포상이 시작된 이래 건국훈장 10,965명, 건국포장 1,280명, 대통령표창 3,266명 등 총 15,511명(여성 433명, 약 3%)에 이릅니다.

앞으로도 국가보훈처는 독립기념관,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지방자치단체, 문화원 등 관련기관과 사료수집 협업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내외 소장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함으로써 알려지지 않은 여성, 무명의 의병 등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 : 앞의 질문과 관련하여 여성, 특히 기생이나 노동자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구술 등 간접적인 기록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고, 1차적인 기록, 사진, 수형기록조차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 점을 보완하는 어떤 조치를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즉, 현재는 주로 수형이나 옥고(3개월)를 최소 기준을 보완하는 조치를 마련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자세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입 : 포상 심사기준의 주요 개선사항은 크게 4개입니다. 첫째, 수형-옥고 기준 3개월을 폐지하여 독립운동으로 3개월 이하의 형을 산 경우도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여성의 경우에는 인적사항과 활동상 등이 자료에서 드러나기 어려웠던 당시의 상황을 감안하여 관련 인사의 일기, 회고록, 수기 등 작간접 자료와 독립운동 참여 가족 정황자료를 활용하고, 정황상 독립운동 사실이 인정되거나 독립운동가 지원 등의 역할이 있을 경우 포상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학생은 독립운동으로 퇴학을 당한 경우 포상을 실시하고, 넷째, 국민통합을 위해 광복 후 사회주의 활동을 한 경우에도 북한정권 수립에 기여하거나 적극 동조한 경우가 아니면 사안별로 판단하여 포상심사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선된 심사기준은 2018년 광복절 심사부터 적용되었는데 금년 3·1절까지 전체 포상자 638명 중 총 435명이 개선된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 전체 포상자 638명 중 여성은 133명이 포상되었는데, 이전까지 1949년 최초 포상 이후 70년간 여성 포상자 수가 299명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 포상이 높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에도 여성 독립운동가와 의병 참여자를 발굴하는 연구용역을 추가로 실시하여 포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발굴하여 포상토록 할 예정입니다.

정 : 포상 심사기준을 완화한다면, 이전에 이미 서훈을 받은 남성을 포함하여 여성독립운동가들의 훈격을 상향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보훈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임 : 현재의 상훈법 상 훈격 재조정은 불가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 발의로 상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상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훈격 재심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매년 여성 독립운동가, 특히 유관순 열사의 훈격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지속되었고, 서훈 등급 상향을 요청하는 국민청원, 국회 특별법 제정 등 사회 여러 분야의 국민적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여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유관순 열사의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가 서훈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유관순 열사가 3·1운동으로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과 애국정신 함양에 공헌하고, 비폭력·평화·민주인권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통합에 기여한 공로를 존중하여 기존 독립운동 공적과 별개로 수여한 것입니다.

정 : 일본이나 만주 등 중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에 비해 하와이 미국, 중남미 등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의 발굴은 미진했다고 봅니다. 하와이나 미국 본토, 중남미의 사탕수수밭에서 노동하던 조선인들이 군자금을 모아 보내고, 실력양성을 위한 교육을 받고 모임을 개최하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 활동했던 것들에 대한 조사 연구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임 : 국가보훈처에서는 일제강점기 해외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독립유공자들을 발굴 포상하고자 해외지역 사료 수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촉된 현지 사료 수집 위원과 현지 출장을 통해서 각국 여러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독립운동 관련 사료들을 수집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미주지역 등 해외 사료수집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료수집은 여성·남성을 구분하여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독립유공자 포상은 매년 꾸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중하고 신속한 독립유공자 발굴 및 포상이 중요합니다. 신속한 발굴을 통해 유공자 본인이 포상 받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2세대 혹은 3세대에게 포상하려 노력 중입니다.

미주지역에서 활동하신 독립유공자분들은 대표적으로 안창호(1962년 대한민국장), 박용만(1995년 대통령장), 홍언(1995년 독립장), 강영소(2011년 독립장) 지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립운동가들의 역할도 중요했지만, 당시 미주에 거주하셨던 한인 한분 한분이 매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1904~05년 사이 한인들은 하와이로 대거 노동이민을 갔으며, 1910년 당시 약 7,700여명이 하와이와 미주 본토에서 노동자로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매일 매일 노동의 대가로 받은 달러를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독립을 위해 '독립금', '3·1운동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주 한인들이 제공한 독립운동 자금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26년간 유지하고 윤봉길 의사 흉구공원 의거에 사용되었습니다. 앞으로 미주지역 독립유공자들의 발굴도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정 : 이번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미진한 여성 독립운동가를 추가로 발굴하기 위해서 재판 판결문, 신문기사, 관보 등 기록물의 조사, 재해석 작업이 필요한데, 보훈처에서 이에 대한 계획을 혹시 갖고 있으신지요.

임 : 정부에서는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끝까지 발굴하기 위해서 독립운동 관련 사료 수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입증사료인 판결문, 수형기록 발굴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는 일제강점기 수형기록을 수집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방문 조사하였으며, 아직 포상을 받지 못한 2,487명의 명단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일제강점기 경성지방법원 1심 재판기록과 항일학생운동 9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광주·전남·부산·경남지역 등의 학생운동 참여 학교 학적부를 중점 수집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다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발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 : 새로운 여성독립운동가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여성국가유공자들의 생활이 남성유공자의 생활과 비교해 더 열악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지요? 있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임 :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는 생활실태 조사는 주로 국가유공자 대상별, 지역별, 연령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대다수가 남성들로 여성 국가유공자 본인 만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생존해 계시는 애국지사는 국내의 포함 41명이며 이 중 여성 독립운동가 본인은 2명이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사망하고 유족이 수권자로 등록하여 관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 : 마지막으로 피우진 보훈처장님의 부임(2017년 5월)이후 이전과 다른 보훈정책이 있다면 무엇을 들 수 있습니까? 처장님의 독특한 이력, “다시 태어나도 군인”이 되겠다는 등 여성으로서 드문 이력 등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처장님이 부임하시면서 최우선으로 수행하고 있는 이전 정부와 다른 정책이나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임 : 문재인 정부의 보훈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국가보훈처 조직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상의 예우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국정과제인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에 맞추어 보훈가족 중심의 따뜻한 보훈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역대 최고 수준의 5% 인상된 보훈보상금을 지급하고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 50%를 인상하였으며 생계 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제도를 신설하여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사망 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증정하여 명예로운 장례를 지원하고 있으며, 생계곤란자에 대한 장례지원 서비스를 신설하는 등 장례안장서비스 지원 강화를 통해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정책을 강화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발굴 및 포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적 심사기준을 개선하였고 연구용역을 통해 그 동안 소외 받았던 여성 독립운동가와 의병 참여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독립운동 유공자 포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중국 충칭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임시정부 청사 연화지 청사 전시물 교체 등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계기로 사적지 건립 및 보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훈심사에 시민참여 제도를 도입하고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토록 하여 국민통합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2·28민주운동 및 학생독립운동 등 독립·민주 관련 기념일을 정부 기념일로 격상하였으며 대한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4월

11일로 변경하여 논란을 해소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 :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등으로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 : 감사합니다.

- 정리 : KWDI 양애경 연구위원/(사)역사여성미래 정현주 상임대표
- 기록 : KWDI 유은혜 위촉행정원